

## 제233호 (2009. 11. 16)

---

### ■ 경제 동향

-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 은행권의 30~35% 수준

### ■ 정책·경영

- PQ 대상기준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개선 건설공사비지수, 실질적 가중치 도출로 활용도 제고

### ■ 정보 미당

- 아시아 3개국의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SOC 길게 보고 멀리 생각하라

##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 은행권의 30~35% 수준

- 비은행권 주택대출 통계 첫 공식 발표 -

### ■ DTI 규제 적용 확대 이후 비은행권 주택대출관련 통계 첫 공식 발표

- 그 동안 공식 발표되지 않던 비은행권 대출 통계가 2009년 10월 처음으로 공식 발표됨.
  - 한국은행의 주택관련대출 통계는 그동안 예금은행에 대해서만 공식 발표해 왔으나, 8월 통계부터는 2007년 12월 이후 자료를 소급하여 비은행권으로까지 확대 발표함(2009년 10월 21일).
  - 그동안 비은행권 대출 규모 및 추이와 관련된 공개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 의 사 결정이 이루어지자 공식적인 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 은행권의 30~35%, 주택담보대출은 18~25%수준...지방 비중 높아

- 2009년 들어 비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120조~130조원 범위로 은행권 가계대출 범위 인 370조~400조의 약 30~35% 수준으로 나타남.
  - 2009년 8월 현재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31.5조원으로 올 4월부터 증가세를 유지
  -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약 47조~59조원으로 추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약 230 조~260조)의 약 18~25%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의 비중이 은행권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말잔기준, 전기대비)>

(단위 : 조원)

구분	2008년말					2009년현재				
	2008.3	2008.6	2008.9	2008.12	2009.3	2009.6	2009.7	2009.8		
비은행권	127.4 <17.0>	118.0 <5.3>	123.4 <5.4>	127.4 <4.0>	131.5 <4.1>	125.2 <-2.2>	128.1 <2.9>	129.9 <1.7>	131.5 <1.7>	
주택대출	54.9 <8.7>	50.1 <2.5>	53.0 <2.9>	54.9 <1.9 >	58.5 <3.7>	54.6 <-0.3>	56.7 <2.1>	57.6 <0.9>	58.5 <0.9>	
주택담보 대출	54.5 <8.7>	49.6 <2.5>	52.6 <2.9>	54.5 <1.9>	58.2 <3.8>	54.2 <-0.3>	56.3 <2.1>	57.3 <1.0>	58.2 <1.0>	

주 :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 대출의 합이며, < >은 증감액임. 비은행권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임.

자료 : 한국은행

- 지역별 여신상황을 살펴보면 비은행권 주택대출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은행권 주택대출은 2/3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비은행권 주택대출은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은행권 : 수도권 207.2조원(76.2%), 지방 64.7조원(23.8%)
    - ※ 비은행권 : 수도권 28.3조원(48.4%), 지방 30.2조원(51.6%)

#### ■ 금융규제 영향으로 은행권·비은행권 모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 비은행권 DTI 규제 확대(10월 8일)가 시행되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10월 이후에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10월부터는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 금융감독원,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잠정치) : 1.3조원(2009.9)→1.1조원(2009.10)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2/4분기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금융규제(LTV : 7월 6일, DTI : 9월 4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 3.5조원(2009.6)→3.4조원(2009.7)→2.8조원(2009.8)→0.5조원(2009.9, 잠정치)

#### ■ 시장 통계 및 지표 정비 관련 지속적인 분석 필요

- 정책 의사 결정의 기준지표라 할 수 있는 기초통계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료 구축과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비은행권의 대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대출용도별, 대출상품별 통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시장과 관련한 통계 및 지표는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방안임.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 PQ 대상기준 자율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 ■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 : 내역입찰제 도입

- 순수내역제 도입 : 1,50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화하여 도입
  - 철도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 의무화 및 확대 여부 검토
- 물량내역 수정 허용 :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발주기관 책임내역제 → 입찰참가자 책임내역제
  - 시행 로드맵 : 2011년(500억원 이상) → 2012년(300억원 이상)
- 대다수의 중견·중소업체들이 숙련된 건적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대중소 기업간 수주 편중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적격심사제도의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
- 운찰제, 나눠먹기식 수주 등의 비판을 받던 적격심사낙찰제도 역시 현행 3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
  - 다만, 중소기업 보호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을 2년간 유보(2012년부터 시행)
-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건설산업의 투자 부진, 대형업체에 유리한 입찰제도 확대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주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적격심사낙찰제도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한다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됨.
- 적격심사제에서 낙찰가격은 유지되도록 하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점수의 합이 최고인

\*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이는 정부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과 지난 8월 19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대부분 당초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기술능력이나 실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하게 되어 일부 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큼.

## ■ PQ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실시 여부를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는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공사이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전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 최저가낙찰제 외의 공사는 공사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PQ 실시 여부를 자율 결정
- 회계예규에서 심사항목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 →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능력이 부족한 기관은 조달청 등의 PQ 기준을 벤치마킹해 정하면 되므로 자율화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선진국과 같이 발주기관별로 PQ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에 자율적인 책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함.
  - 하지만, PQ를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간주하고 통과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견, 중소기업들은 공공공사에서 PQ를 통과하지 못해 수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 재정 집행의 효율성 확보가 제도 개선의 초점

- 기획재정부의 계약제도 개선안에는 국가계약제도의 틀을 흔들어놓을 만큼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주기관의 자율성 강화, 입찰 경쟁 강화를 통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확보가 초점
  - 가격 위주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 계약제도의 밑바탕을 만들려는 시도임.
- 정부계약제도는 ‘양질의 물품을 최저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나, 업계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약자(중소, 지역업체 등) 보호 등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
  - 대다수의 중견·중소 업체들의 생존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약제도 개선(안)은 대중소 기업 간 수주 편중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 개선 건설공사비지수, 실질적 가중치 도출로 활용도 제고\*

- 건설연, 기존 건설공사비지수의 단점 보완 후 개선 -

- 건설산업의 전체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생산 체계의 변화를 추적하며 시설물 종류별 공사비 상승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하에 각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가 요소들의 투입비중(가중치)과 가격변동추이(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작성됨.

### ■ 기존 지수, 건설생산체계의 특성 반영에 한계

- 기존에 개발된 건설공사비지수로는 대한건설협회와 통계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관련 지수가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유일함.
- KICT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의 건설관련 품목과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 조사보고' 자료의 전체 직종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됨.
- 기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되므로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으나, 지수산정에 활용되는 가중치 및 가격지수가 건설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님.

### ■ 개선된 지수, 공사원가 투입구조의 원본 DB 구축으로 활용도 확대

- 시설물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된 77개 분류에 기초, 건협이 매년 조사하는 '건설기성 실적'의 공사비 규모에 의하여 시설물별로 가중치가 편중되지 않으면서 투입구조가 유사한 시설물을 동일분류에 속하도록 구분, 건설시설물을 소분류 16개로 정함.
- 가중치 구조 : 설계내역서상 투입품목들의 가중치를 이용하되, 개별내역 품목들의 가격지수가 유사하게 거동하는 품목들을 묶어 대표품목을 도출하고 표준 품목화하여 대표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함.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총 4개년에 걸쳐서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 가격지수 : 대표품목들에 대한 시중 물가정보지의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지수 산출
- 직접적으로 내역서상의 품목가중치를 통계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중치구조를 도출하였으며, 건설공사의 원가 투입 구조에 대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확대함.

#### ■ 기존 지수보다 가격 변동폭 크게 낮아

- 2008년 이후로 약 10%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KICT지수의 변동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적용된 가중치 구조와 투입 품목별 가격지수의 차이로 인한 것임.
  - 특히, 투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가격 변동폭이 두 지수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KICT의 가격 변동폭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에스컬레이션 관련업무 대폭 축소, 기존 국가통계 조사체계 개선에 기여 가능

- 공공발주기관의 에스컬레이션 업무는 지수조정방법과 같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품목별 확인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계약금액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상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방법 중 지수조정방법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서, 건설공사비지수(공공발주기관의 시설물종류별 공사비지수) 적용을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에스컬레이션 관련 업무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음.
- 공공발주기관별 세부시설물 분류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별 공사비지수를 이용한 계약금액변동방법을 「국가계약법」상에 신설하고, 공공발주기관별로 공사비지수들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활용 가능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 투입 구조에 대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통계의 조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김우영(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 아시아 3개국의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 ■ 홍콩 :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향후 10~15년 간 호조세 예상

- 2004년 이후 경상가격 기준으로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던 홍콩 경제(건설산업 성장률은 낮음)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에는 3.8%로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9년 2/4분기 이후 중국 본토와 홍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
- 홍콩의 건설산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향후 10년 내지 15년 기간 동안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건설투자 규모는 518억 홍콩 달러로 추정됨.
  - 홍콩 정부는 South and West Island Line, Hong Kong-Zhuhai-Macau Bridge, Lam Tin Tunnel 등 10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 <홍콩의 GDP 및 건설산업 성장률>

(단위 : %, 경상가격 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8.5	7.1	7	6.4	3.8
건설산업 성장률	-10.1	-4.6	0.04	3.79	-

### ■ 일본 : 건설투자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 지속, 민간건축도 위축 경향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대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해 온 일본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와 자원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08년 -3.3%, 2009년도에는 -3.6%로 하락세로 반전
-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거듭해온 건설투자는 2008년에는 47.2조 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2년도의 피크에 비하면 47.3%나 감소한 수치임.

\* 본 고는 제15차 아시아인프라포럼(2009.10.19~21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개최)에서 발표된 아시아 7개국의 건설경기 동향 관련 자료 중 홍콩, 일본 및 싱가포르의 자료를 요약한 것임. 한국을 비롯하여 7개국이 발표하였으나 이 중 상대적으로 통계자료의 이용과 분석이 용이한 3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국가별로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과 내용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민간건축은 2007년에는 건축 기준의 강화로, 그리고 2008년에는 세계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2000년 이후 하락을 거듭해온 공공건설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2008년 증가세로 반전
- 2009년의 일본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45.84조엔으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44.17조엔(2009년 대비 -3.6%)으로 추정됨.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 건설투자액 추이〉

(단위 : %, 십억엔)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예측)	2010(예측)
GDP 성장률 (2000년 가격 기준)	2.3	2.3	1.8	-3.3	-3.6	0.8
명목건설투자액 (증가율)	51,568 (-2.4)	51,328 (-0.5)	47,900 (-6.7)	47,230 (-1.4)	45,840 (-2.9)	44,170 (-3.6)

■ 싱가포르 : 건설업 2007년 이후 20% 내외 성장, 국가경제 성장의 실질적 리더

- 싱가포르 경제는 2004~07년 기간 동안 GDP성장률이 7~9%대로 높았으나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1.1%로 급락하였고, 2009년에는 -6.0% 내지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도까지 GDP 성장률보다 낮았던 건설산업 성장률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8.2%와 20.3%를 나타내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리드해 나가고 있음.
  - 2008년 건설투자는 주택과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공건설수요와 민간부문의 건설수요가 동시에 증가하여 346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9년에는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건설의 위축으로 180억~240억 싱가포르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싱가포르의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건설투자액 추이〉

(단위 : %, 십억싱가포르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예측)
GDP 성장률 (2000년 가격 기준)	9.3	7.3	8.4	7.8	1.1	-6.0~-4.0
건설산업 성장률 (2000년 가격 기준)	-5.5	0.7	3.6	18.2	20.3	-
명목건설투자액 (증가율)	10.3 (3.0)	11.5 (11.7)	16.8 (46.1)	24.5 (45.8)	34.6 (41.2)	18~24 -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10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공공주택 디자인 품질개선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공공주택의 공공디자인 품질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자료 검토 및 자문
11.11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주최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부동산 부문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동향 점검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자문

■ 연구원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기획발간물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보증시장의 구조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개방논의가 진행되고 있음.</li> <li>▪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 이럴 경우 상당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은 건설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음.</li> <li>▪건설보증시장은 현재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등 경쟁구조에 있기 때문에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현행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함.</li> </ul>

※ 연구결과물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열람 가능

■ ‘주택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11. 16(월),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후원으로 신영수 국회의원,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11. 16(월) 15 : 00,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여의도 소재)
- 주 최 : 신영수 국회의원
- 주 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 주제 발표
  - 제 1주제 :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김현아 연구위원)
  - 제 2주제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 SOC 길게 보고 멀리 생각하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 증가한 291.8조원으로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외교통일 분야가 14.7%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R&D와 보건복지 분야가 각각 10.5%,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OC 부문은 3.5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되었는데도 올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심지어 교통시설 예산은 1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SOC 재정 투자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예산 가운데 SOC 비중을 올해 8.68%에서 2013년에는 7.96% 수준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조세 수입 증대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재정 지출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복지·교육·국방 등 다른 부문의 재정소요 증대로 SOC 예산확충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부족한 정부재정을 공기업의 투자 확대, SOC 민자사업 및 민간선(先)투자의 확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30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로 상당수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재 상당수 민간투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6~7년 전 제안돼 사업 시행자가 결정된 10조원 규모의 수도권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금융권의 투자(대출) 기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민간선투자도 금년 목표 1조원에 훨씬 못미치는 2,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통부문 SOC 예산 축소는 과거 공공건설 현장에서 빈번했던 공기 지연 현상을 재연할 가능성조차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의 적기준공과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SOC 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자사업활성화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과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선투자 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수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SOC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적정한 투자시점을 놓치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 격이 될 수 있다. SOC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적정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시아경제, 2009. 10. 22>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